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 2006 Edition

Summary in Korean

2006 년도 국제 이주 전망보고서 : SOPEMI

국어 개요

사설

이주 관리 - 신중을 요하는 균형작업

이주 증대와 노동력 부족현상의 심화로 OECD 국 정책 아젠다에서 이주 사안이 급부상한 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OECD 국에서 국제이주는 정책 아젠다의 중요사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90년대 급증가를 이루었던 이주 흐름은 최근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망명 이주, 관광체류 연장 등의 비정규적이거나 관례에 벗어난 이주 경로를 간간히 활용하고 있다. 매년 OECD 국에 법적 입국하는 장기 이주민은 현재 3백만 명에 달하며, 일시 이동은 외국인 유학생을 합해 그 이상의 수준이나 되는데(1장 참고) 이는 불허용 이동을 치지 않은 수치다. 둘째로, OECD 국은 인구 노령화와 (과학, 건설업 등의) 일부 직종에 대한 국민 관심 저하로 머지않아 외국인 근로자 이주를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점점 늘어나는 과거·최근 이주민이 접대국에의 통합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만 실현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 국가의 노동시장에 드러난 이주민 성과는 과거·최근 이주자 양자 경우이나, 하물며 이들의 자녀 경우에조차, 예전만큼 유리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주 관리는 난해한 균형 작업이 되었는데

따라서 국가정부는 국내 요구에 상응한 기술 인력 유도를 목적으로 한 국제이주 개방, 국민과 이주 후보자에게 정부가 불허 이동을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굳히는 이주민 유입 관리에의 결단, 이주민 통합을 위한 효과적 정책 집행, 이 3대 요소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

이 때 적당한 균형을 이루기란 쉽지 않은데 이는 선발 이주와 선발 외 이주, 일시 이주와 영구 이주, 고숙련자 이주와 저급기술인력 이주, 보다 일반적으로는 개방과 통제의 양자 요소를 적절히 혼합해야 함을 뜻한다.

이주자 선발 작업은 간단하지 않으며, 모든 이주자가 선발 대상인 것은 아니다

첫째로, 이주자 선발은 반드시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실제로 모든 국가에서 이주 이동에 관한 정부 재량이 한정된 경우가 적잖은데 이는 (거주자의 가족 합류나 배우자 및 입양아 선택 권리 등의) 기본인권 인식이나 (피난민 관련 제네바 협약, 자유이동조약 등의) 국제협정 체결에 기인한 경우다. 이러한 ‘재량 외’ 이동은 이미 접대국의 노동 공급처를 이루고 있으나 이 인력이 국내 필요 직종에 반드시 연관된 것은 아니다 (2장 참고). 따라서 국내 필요 직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총 이주민 수를 늘려서 필요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유인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어떤 국가는 어학능력, 근로 경력, 학력, 나이를 토대로 이주민을 선발하며...

이주자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만큼, 뽑아야 하는가? 어학 능력, 근로 경력, 학력, 나이 등을 토대로 이주 후보자 특징에 점수를 부여하여 요구된 최소점수를 탄 사람에게 한해 선발함이 바람직한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이 경우에 속하는데 이러한 이주 제도는 나머지 OECD 국이 따라야 할 모델로 곧잘 간주된다. 전자 국가 경우, (가족 구성원을 합한) 이주 인구의 60% 이상이 숙련 이주민층에 속한다,

...어떤 국가는 고용주가 선발작업을 행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과 함께 바로 취업에 들어간다

실제로는 유럽연합 같은 자유이동체제하의 이주자를 제하면 법적 이주 근로자는 어느 국가에서나 선발과정을 밟는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차이가 있다면 이 선발이 국가행정기관보다는 고용주에 의해 실시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가정부는 간간히 급료, 직업, 교육상의 기준사항 준수를 강요하면서 이주 가능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고용주에 의해 선발된 이주자 경우 입국과 함께 바로 취업이 되므로 낯설은 국가에서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역사적으로 호주, 캐나다가 사전일자리 없이 선발된 이주자를 노동시장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좋은 효과를 보았으나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경력과 자격에 가치를 덜 부여하게 되면서 최근 이러한 방식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마저 일자리 제안에 맞게 이주 후보자의 점수를 매기면서, 이미 국내에 일시적 신분으로 체류 중인 사람을 우선 선발하기 시작했다.

입국자 수 결정 방식은 명료치 않으며...

이주자를 적정한 수로 국내 유입하는 일도 어려운 사안이다: 이주자를 과잉 유입하면 이 중의 일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과소 유입하면 노동시장 여건을 긴장시킬 수 있다. 수량 목표나 제한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이주 흐름을 관리하는 국가도 더러 있다 (2장 참고). 이러한 목표 설정 방식이 반드시 명료하진

않으나 이 목표는 인구통계적 목표, 과거 경험, 노동시장 및 국민여론에 의한 수용 여부의 정치적 판단 등을 일부 반영하는 듯하다.

... 일부 국가는 사전규정된 목표나 제한수준을 설정하여 준수하는 식으로 이주를 관리한다

목표나 제한수준 설정은 정부가 이주 이동을 잘 관리하고 있는 입장임을 국민여론에게 입증시키는 이점이 있다. 하나, 이 사안은 국내노동 요건에 일치되게 신중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예로, 자격을 갖춘 취업 후보자가 남아 있는 자리 수를 초과할 경우 인력 축적의 위험이 생기며, 이 축적은 욕구불만을 초래, 이주 제도의 유연성을 저하하면서 자격을 갖춘 나머지 후보자를 불법 입국이나 체류로 몰고가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일시적 이동은 일부 인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인데...

일시적 이동은 국내 인력난을 일부 흡수할 수 있는데 이미 이 분야에서 성공 사례가 몇몇 있었다. 이는 실시해야 할 근로 자체가 성격상 일시적이고, 고용주를 비롯한 제반 관계자가 채용에 참여하며,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향후 수년간 연장될 기회가 제공된다는 여건 하, 일시적 이동도 관리가 가능해짐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정기적, 기존의 인력난은 별도의 경우다

회의적 국민여론을 납득시키기 쉽다는 이유로 대다수 국가가 저급기술인력에 한해서는 일시적 이동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실로 이 노동력은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덜한 편이고, 접대국에의 통합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기존의 정기적 인력난을 일시 근로자의 순환적 채용으로만 적절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실로 고용주는 신뢰할 수 있는 근로자의 정착을 원하지 항상 신진만의 훈련을 원하지 않으므로 일부 저급기술인력의 이주 영구화가 필요해진다.

수요강세에도 불구하고 노동허가증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면 불법 이동의 위험이 커진다.

저급기술인력의 입국 가능성이 희박하고 국내에서 이 인력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노동 공급처가 변변치 않을 경우, 불법 이동 현상이 야기될 위험이 있는데 이 현상은 불법 이동, 불법 근로에 대한 통제가 미비된 국가에 더욱 두드러진다. 불허 이주 인구가 총인구의 3% 이상으로 추정된 국가도 더러 있다. 하지만 불법 고용이 꼭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다. 불법 이주자의 사면제 실시를 통해, 고용자는 취업 희망자에게 증명된 일자리 제안을 수시로 제공해야 하는 만큼 불법 근로자 채용을 반드시 선호하는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허가증이 충분한 수로, 신속히 전달되게 하는 적절한 노동허가제를 고안, 도입하면 고용주 요구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급기술인력 이주는 개도경제하의 인력 수출국에 심각한 손실이 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고속런 이주자를 원한다. 실로 거의 모든 OECD 국이 이주민의 접대국이 되면서 이주민 중 특히 고급기술인력의 유인 및 정착을 목적으로 한 국간 경쟁이 보다 심화될 조짐이다. 이 때 자국어가 국내에서만 활용되는 언어이면, 어학이 틀림없는 문체 사항이 될 것이다. 한편 고속런 이주자조차 OECD 국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들이 본인 자격에 미달된 일자리에 취업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난다. 졸업 예정 유학생의 채용 또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유학생이 본국에 상당액의 송금을 공급하여 도움을 준다 해도 유학생 출처국에는 특히 소국가 경우에, 심각한 손실이 될 수 있다 (3 장 참고). 따라서

OECD 국은 이러한 (신속 통합 목적의) 채용에 따른 이익과 이로 야기될 수 있는 두뇌유출 역효과를 잘 가늠할 필요가 있다.

국제 이주에 대한 공공정책 및 연설은 공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주자 통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주 입국 및 체류에 제약을 가하고, 이주에 대한 정부 연설에서 간간히 애매한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렇듯 제약과 연설 사이에서 균형을 잃으면 현재 이주민과 이들 자녀의 국내 통합은 물론 국내 필요 유형의 이주민을 유인하기 위한 국가 노력 차원에서도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주 후보자는 이주 대상국 선택이 넓은 만큼 이주민이 환영받는 느낌을 못 주는 여건은 국내 노동시장 및 교육 성과의 저하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균형작업에 성공한 국가가 선두 위치에 설 것이다

요컨대 접대 국가는 국내 인력난 해결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이주 후보자에 대해 환대적이면서도 결단력 있게 대처함으로써 이주 이동 관리상의 공정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야 국제 이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 OECD 2006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